

미국, 시리아·이라크에서 백린탄(핵무기 다음가는 대량살상무기)을 사용하다!



영국판 세월호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

2면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논란
대체 무엇 때문인가?

3면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각축전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4~5면

성소수자 운동 논쟁
누구와 연대해야 하나

7면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영구히 국유화하라

6면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가 이토록 초점이 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참사에는 영국 사회의 폐단이 한데 집약돼 있다.

이번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 동네에서 몰아내는 것과 연관 있다.

또, 인종차별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한층 천대받는 것, 건축 재정의 고통스런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계급 문제와 연관 있는 것이다.

이번 참사로 개발업자들의 탐욕이 그 민낯을 드러냈고, 이 체제가 기업들의 맹목적 이윤 추구를 부추기면서도 관련 규제는 깡그리 없애려 든다는 점이 폭로됐다. [공영주택 관리 책임이 있지만] 평범한 주민들을 내팽개치는 지자체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화재 이후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데 말이다.

이번 화재는 여하튼 뭔가를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 쟁점이 됐고 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갖게 됐다.

주민들은 침묵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품위”가 아니라, 지지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며 존엄성을 지키기로 했다.

인화성 때문에 미국과 독일에서는 금지된 외장재를 사용해서라도 1제곱미터당 2파운드[약 2천9백 원]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은 바로 영국의 자본주의가 부추긴 것이다.

이 외장재가 선택된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인근 부촌의 부자들이 보기에 도 외관이 손색없다는 것이었다.

책임자들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테러가 일어나면 언제나 경찰은 잠재적으로라도 연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집에 쳐들어가 그들을 끌고 가곤 한다.

최근 15년간 영국에서 일어난 모든 테러의 희생자 수를 합한 것보다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 때문에 조사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

런던 그렌펠타워 서민주택 화재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폐단을 드러내다



사진 출처 Natalie Oxford

도 없다.

경찰은 살인적 건축재정을 추진한 보수당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잡아넣어야 한다. 또, 그렌펠타워 일대를 돈벌이 기회로만 본 돈 많은 투기업자들을 체포해야 한다.

6월 17일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는 그렌펠타워 같은 건물에 그런 [인화성] 외

장재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가?

희생자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은 24시간도 안 돼 구속돼, [벌써!] 징역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될까?

이번 참사를 두고서 당장 요구할 만

한 쟁점이 수십 개다. 모든 고층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할 것, 적절한 건물 안전 규정을 즉각 제정할 것 등.

그러나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야 한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메이 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활동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16일 등 런던에서 벌어진 것보다 더 강력한 항의 행진을 조직하고 이번 참사를 다른 모든 부문의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투쟁을 전진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메이 총리 퇴진 행동을 즉각 호소하는 것이다.

얼마 전 총선에서 1천2백만 명이 코빈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만큼, 코빈 자신이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산 사람들을 위해 싸우자고 시위를 호소한다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노동당 우파조차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 징발을 주장하는 지금, 코빈이 파업을 호소해서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보수당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게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의회 내에서 메이를 압박할 수단을 찾고 보수당을 더 큰 위기로 내모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을 공식 정치만으로 제한할 때가 아니다. 체제의 목을 노려야 할 때다.

17일 코빈은 그렌펠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부유층 소유의 빈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주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급진적 조치도 필요하다.

그렌펠타워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쩌다 벌어진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체제의 일상적 작동 방식이 날카롭게 드러났을 뿐이다.

그렌펠타워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 결의를 참사의 진정한 원인인 계급 분단 체제를 끝장내는 데로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의 분노는 오직 혁명을 위한 투쟁으로만 풀릴 수 있다. 권력을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혁명이 필요하다.

그렌펠타워 참사에 대한 최상의 복수는 바로 혁명이다.

찰리 김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559호 / 번역 김준효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악마의 무기’ 백린탄 사용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에서 끔찍하게도 백린탄을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이하 아이시스)에 우호적인 세력은 물론이고 아이시스에 반대하는 세력도 미군이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고발한다.

백린탄은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힌다. 뼈가 드러날 때까지 피부를 녹여 없앤다. 네이팜탄과 비슷하다.

라카 동부에서 촬영된 폭발 영상을 보면,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 작은 폭발체들이 사방으로 퍼지는 백린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M825시리즈 155밀리 포탄으로 추측된다.) “라카가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름의 이 영상은 6월 초에 아이시스 반대 활동 단체가 공개한 것이다.

M825 포탄이 폭발하면, 백린이 가득 찬 썰기형 용기 약 1백15개가 투하된다. 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이

썰기들이 매우 멀리까지 확산돼 광범한 지역에 화재를 낸다.

지난 몇 달간 수천 명이 라카를 탈출해 나왔지만, 유엔은 여전히 16만 명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미군 주도 연합군 대변인 라이언 딜런 대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전쟁 규범에 따라” 백린탄을 썼음을 시인했다.

지난 5월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에 배치된 미 해병대의 M777 곡사포(라카 작전 수행 지원 목적으로 배치됨)와 함께 백린탄 포탄이 적재돼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무기

이 사진은 3월에 찍힌 것으로, 해당 부대는 미국으로 복귀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대와 교대한 부대가 유사한 포탄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카에서 사용된 무기는 6월 초 모술에서 사용된 무기와 유사하다.

지난해 10월 국제 엠네스티는 모술에서 백린탄이 사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형태로 사용되든 백린탄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린탄 썰기가 땅이나 물 속에 묻히면, 불이 일시적으로 꺼진다. 그러나 공기 중에 다시 노출되면 재점화된다. 따라서 이를 예상치 못하는 민간인이 해당 지역을 지나다가 우연히라도 썰기를 파헤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미군이 백린탄을 널리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2005년 11월 〈BBC 뉴스〉는 미군 잡지 《야전포병대》에 실린 기사를 보도했다. 그 기사는 팔루자 전투 [2004년 미군이 벌인 이라크 팔루자 민간인 학살]에서도 백린탄이 사용됐

다고 보도했다.

미군 대위, 중위, 병장이 작성한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백린탄(WP)은 효과적이고 다방면으로 유용한 무기였다.”

“우리는 호송 임무 중에 백린탄 두 발을 사용했고, 나중에 교전중에도 사용했다. 고폭탄으로는 타격할 수 없는 참호나 땅굴에 숨은 반란군을 공격하는 매우 효과적인 심리적 무기였다.

“반란군 토벌 작전에서 우리는 백린탄을 사용해서 적을 엄폐물에서 끌어내 고폭탄으로 섬멸했다.”

미국과 연합국은 모술과 라카를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껏 저질러 온 기나긴 전쟁 범죄의 역사에 또 한 줄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찰리 김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558호 / 번역 최병현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 철도노동자 이진영씨를 무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토목건축 노동자들 상경 투쟁 예고

★ 제국주의 국가 대사관과
다국적기업의 쿼터문화축제
참여는 위선이다

★ 녹색당은 어떤 정당인가
계급을 만나지 못한 생태주의

★ 프랑스 총선 결선 결과

★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양극화하고 있는 영국 정치

★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속아내 처벌하라

★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는
정부지원금사업 철폐를 결정해야

★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논란 배경

세계 전략을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김종환

지금 미국 정계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뜨겁다. 의회에서는 진작부터 4개 위원회들(상원 정보위, 상원 사법위, 하원 정보위, 하원 정부감시위)이 각각 조사를 진행중이고, 법무부 임명 특별검사가 지난 5월부터 “범죄 수사”에 들어갔다.

주류 언론은 해임된 FBI 국장과 특검(역시 FBI 국장 출신)을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자’인 양 치켜세운다. 그러나 그들은 조지 W 부시와 오바마의 재임 기간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수뇌부들이었다.

지금의 논란 뒤에는 미국 지배자들이 봉착한 까다로운 전략 문제가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유라시아(유럽+아시아) 대륙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세계 인구의 다수가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이렇다. ①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진출을 막고 유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② 중동의 석유를 통제한다. ③ 동쪽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세 지역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 독일, 일본 등의 추격 속에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계속 낮아진 탓이다.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지금 트럼프 정부를 흔드는 논란은 미국 패권이 불안정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으로 삼는다. 이 점에서는 전임 대통령 오바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보다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공조를 얻으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인색한 서유럽 동맹국(특히 독일)을 압박하려 한다. 문제는 러시아가 2008년 세계경제공황 이후에만도 현재 조지아·우크라이나·시리아·북한 등지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의 의사를 직접 거스르거나 적어도 미국의 행보에 어긋장을 놓는 방

식으로 그랬다. 더욱이 러시아는 냉전기에 (소련으로) 미국의 대척점에 서서 세계를 양분해 패권을 행사한 제국주의 국가였다. 그때에 비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을지라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거점과 인적·제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군사력도 여전히 세계 2위다. 전통적으로 미국 지배자들은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사려 깊지 못하고 무모한 모험도 저지를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

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겨뤘던 미국 정보기관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러시아는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풀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가뜩이나 불안정해진 유럽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극우 정치인들의 부상을 부추기는 효과를 내어,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동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 당장 시리아는 안정될지 몰라도 미국의 중동 패권(이라크 점령 실패로 이미 크게 휘청거렸다)이 더 흔들릴지 모른다는 점을 미국 지배자들은 우려한다. 즉, 앞서 말한 미국의 핵심 전략 중 두 개(①, ②)가 흔들릴 수 있다.

더 위험해진 세계

미국 패권의 진정한 문제는 현재 미국의 지배자들이 심각하게 분열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 중 누구도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하락에 관해 뚝 부러지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위기를 키워 왔고, 그 덕분에 트럼프 같은 모험주의적 인물이 부상한 가운데, 전략 변화를 놓고 미국 지배자들 다수가 트럼프에 저항하면서 분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전략의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서든, 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든 군사적 모험을 벌이는 것 말이다. 제국주의 열강뿐 아니라 지역 강국들까지 가세해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의 수시로 변하는 전황이나, 중동 정세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다시금 서로 으르렁거리는 데 이어(지난 호 필자의 기사 ‘카타르 단교 사태, 이란 테러...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참고), 최근 미국이 시리아 상공에서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건은 중동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동북아시아에서 도박을 벌이기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정치 위기와 미국의 전략 위기 모두 지금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자신이나 다른 미국

지배자들이 더 큰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올해 4월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서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세 대가 서로 대치하던 상황은 그런 미래 위험을 얼핏 보여 줬다. 오늘날 미국 공식 정치권의 논란이 미국 패권의 불안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좀 더 위험한 지정학적 위기를 수반할 것임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원천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즉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 추천 읽을 거리: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마르크스21》 20호

마르크스21

20호 2017년 5~6월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20호 2017년 5~6월

9,000원

[특집1] 페미니즘과 성 해방

[장점]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특집2] 1987년 6월 항쟁·노동자 대투쟁 30주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강영익

“우리는 역설(paradox)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랜드 2035》의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결과 여러 모순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 미국 지배자들의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듯하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장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경제력 분포가 계속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새로 떠오른 강대국들이 기존 강대국들의 이점을 상쇄하고 능가하려 들고, 기존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한다. 레닌이 말한 “세계 재분할의 압력”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까닭이다.

레닌의 분석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동아시아는 그간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지역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가장 큰 이점과 혜택을 누려 무섭게 성장했다. 중국의 부상은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낳았고, 이로 인해 미국 지배자들은 자국의 패권이 중장기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이 악화했고 각국은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키워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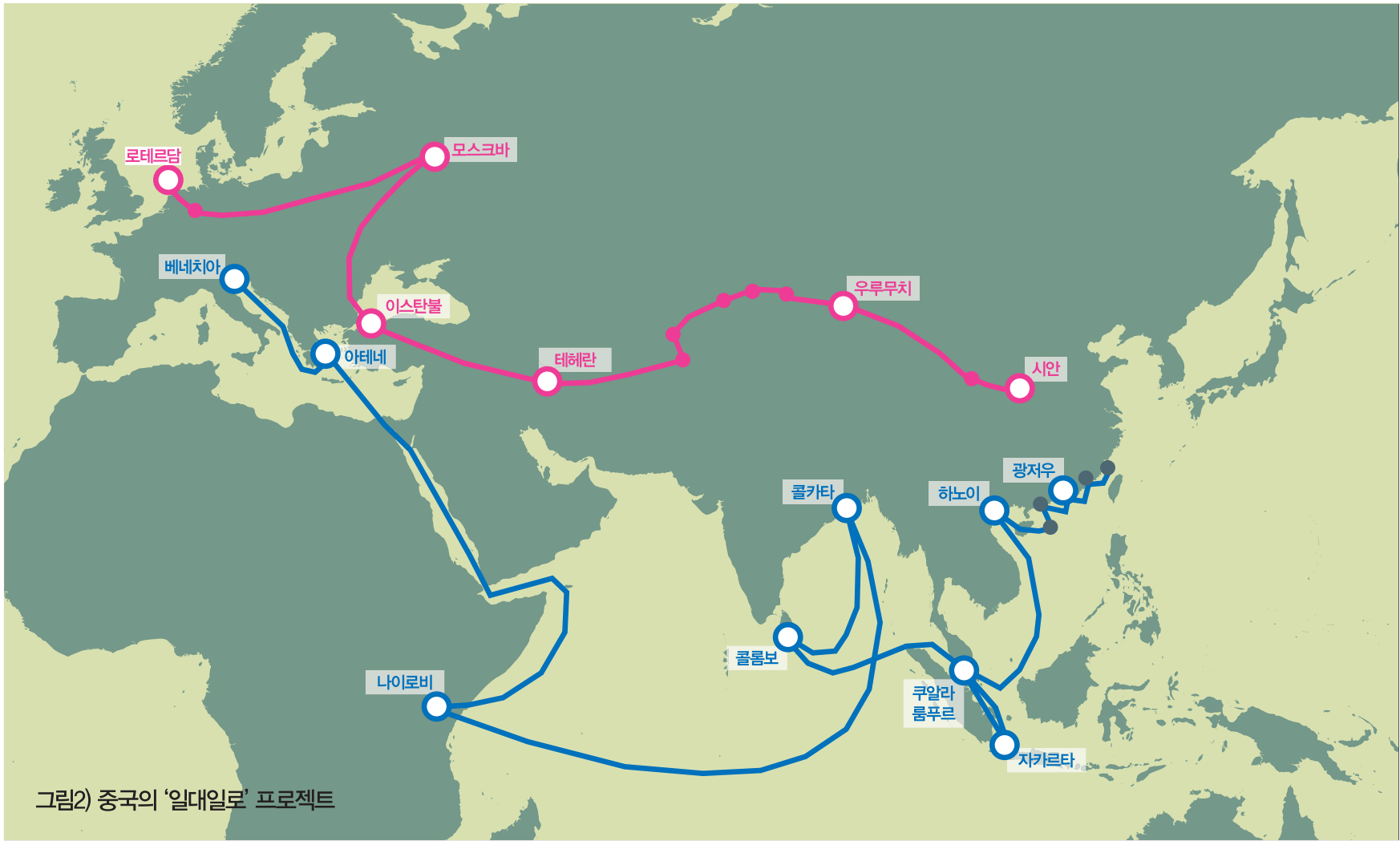
세계화의 역설

그럼에도 자본주의 변호론자들 중에는 여전히 제국화 덕분에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전쟁이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와탈 중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의 효시는 1백여 년 전쯤 개척주의를 주장하고 실천한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 카를 카우츠키였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치른 사례가 있는 데다가(대표적으로 1914년 당시 영국과 독일), 친밀한 경제적 관계가 오히려 불안정 약화의 요인이 된 사례도 있었다(1941년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한다.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경제들은 미국에 많은 공산품을 수출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커다란 경성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 대신에 동아시아 경제들이 비축한 달러 중 일부를 빌어와 미국의 적자를 메웠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순환 구조가 2000년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간 핵심 동력이었다. 일본·독일·한국 등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쪽으로 산업을 재편했고, 중국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원료 생산국들의 통 큰 고객이 됐다.¹



그러나 한때 세계경제 성장을 이끈 이 상호의존 구조는 결코 안정적인 체제가 아니고 (앞서 논의한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세력관계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위험을 품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 모두 2008년 이후의 경제 위기에서 제대로 헤어 나오지 못했고, 다시 한 번 심각한 위기에 빠졌 가능성이 있다. 마르쿠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지난해 미국 경제의 특징을 이렇게 꼽았다. “제조업 산출 감소, 기업 활력 감소와 자본재 주문의 부진, 기업 이익의 하락.” 그래서 미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듯하지만 기업 투자가 여전히 바닥을 기는 등 근본적 문제는 여전하다. 트럼프가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슬쩍 낮췄다(4퍼센트→3퍼센트).²

중국 경제도 점점 불안정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중국 정부가 은행들을 독려해 대대적 자금 융통을 벌인 것이 점차 큰 부담이 돼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에 대응해 상이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는 경제력 상호의존이 높은 국가들 간의 협력적 경제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각국의 경쟁과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즉각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서 자금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는 수입 상품을 규제하겠다고 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들인 중국·멕시코 등에 징벌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누적된 무역적자(특히, 대중국 적자)를 더는 용인할 수 없고(그림1), 미국 패권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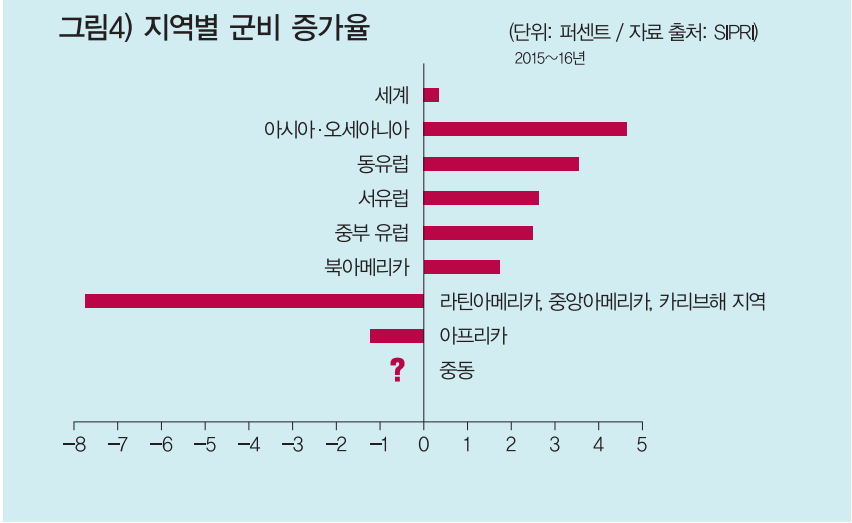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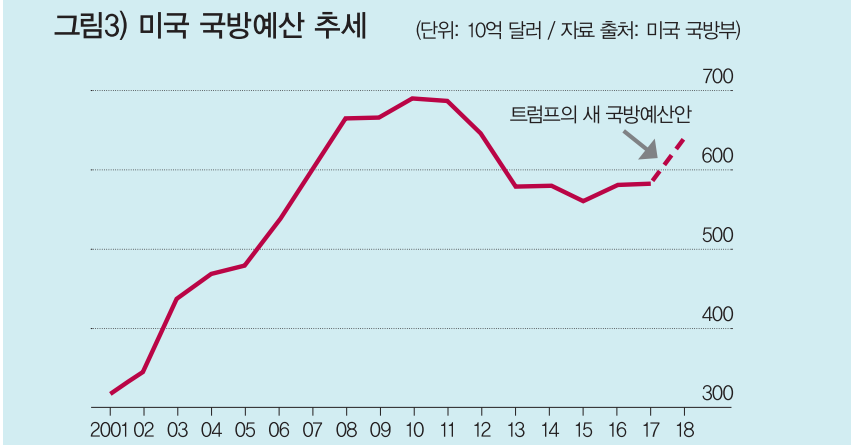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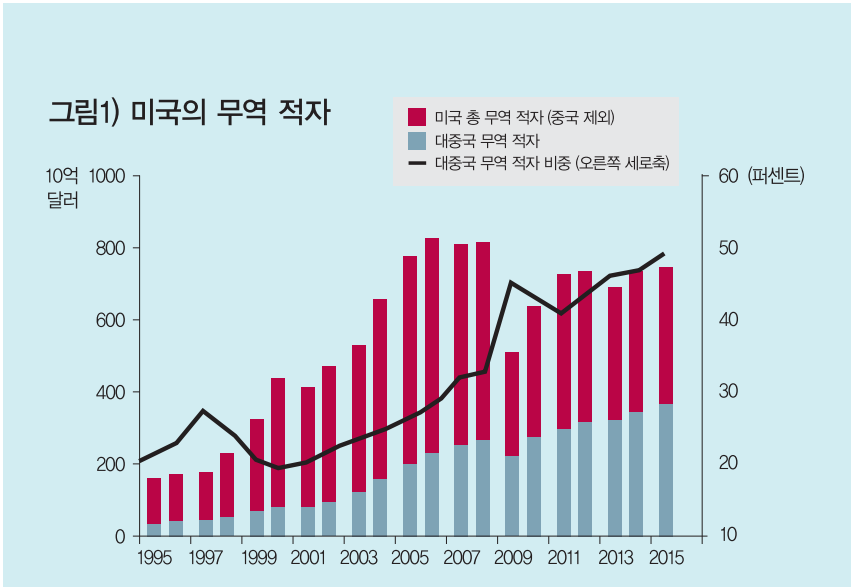
국제화한 생산 사슬을 미국으로 되돌려, 약화된 미국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갈등도 불가피해 세다.

트럼프의 정책 노선은 미국 경제라는 중환자가 앓는 병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이다.(그러나 이것 때문에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 정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주요 서방 경제들과의 갈등을 키울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들 사이의 주요 지정학적 충돌물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 구조 바깥에서 성장했고, 가장 위협적인 지정학적 경쟁자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다.(중국과 미국 자본가 양 측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지만 말이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는 지정학적 갈등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시진핑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개혁·개방의 결과로 중국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막임감이 없다는 일부 좌파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자, 시진핑은 바로 중국이 세계화의 수호자이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한테 TPP의 대안이 될 만한 다자 무역협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G7이나 G20 회담에서 ‘보호무역을 역설하는 동안,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포럼을 대대적으로 열어 20개국 정상들을 비롯해 1백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들을 참석케 하는 데 성공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를 중국 중심



의 인프라로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야심 찬 개발 프로젝트다(그림2). 이 계획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해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요 경제지형을 중국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깔려 있다.

중국 경제의 지리적 확장과 시진핑의 역대 경제집시 재편 시도는 미국 패권에 위협이 된다. 단지 동아시아뿐 아니라 중동·유럽 등지에서 미국의 통치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이처럼 주요 강대국들은 장기 경제 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상이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패권 국가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제국주의 간 갈등과 경쟁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제국주의 간 경쟁 강화는 핵군비 경쟁을 포함한 군국주의 강화를 수반한다.(평화주의를 수용한 일부 좌파들은 핵군비 경쟁과 같은 군국주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군사적 측면임을 간과한다.) 중국 제국주의의 군비 증가는 이제 상수로 여겨질 만큼 지속돼 왔는데, 이는 중국 자본주의가 무역과 투자의 큰 손으로 변모해 온 것과 관련 있다.(해에서의 자국 이익을 군사력으로 보호해야 한다.)

트럼프도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비롯한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그림3). 이 주된 타깃이 중국인 것은 물론이다. 사드의 성주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전진 배치 계획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군비 증강은 단지 미국과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두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에 자극받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그림4).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을 선도하는 지역이 됐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을 내세워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하려 한다. 한국 지배계급 자신이 동아시아 불안정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국가의 경쟁이 훗날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지는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쟁으로 기존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이따금 앞뒤 안 맞는 발언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이에 대응한 반발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취임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 러시아와 일본

앞서 언급했듯이 동아시아에서 단지 미국과 중국만이 경쟁하는 게 아니다. 러시아·일본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 경쟁과 갈등 구조에 얽혀 있으며, 그다음으로 한국·북한·대만 같은 아류들도 있다.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도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은 비교적 다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신장이 거기에 가 있는 틈)이 제공한 기회를 잘 이용해 다시 부상한 제국주의 국가다.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경제가 회복된 것에 힘입어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에서 영향력을 제고해 왔다. 동유럽에서 서방과 갈등을 빚자, 러시아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방의 제재에 따른 피해를 동아시아에서 만회하고 새 지정학적 출로를 찾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말 러시아 정부는 옛 소련 시절의 해외 군사기지들의 복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계획에는 베트남 캄란만도 포함돼 있었다. 이미 러시아 해군은 캄란만에 정기적으로 입항하고 있다. 캄란만은 미국과 일본도 눈독을 들이는 남중국해의 군사적 요충지다.

얼마 전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 2척이 인도양 일대를 돌고, 버마·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홍콩 등지에 기항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를 국제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

러시아의 동방 확대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접근하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

국가 중에는 북한이 있다. 과거 일본을 오갔던 북한 여객선 만경봉 호가 러시아와 북한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기 시작한 데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17~18년 교류계획서”를 체결하는 등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입을 손실을 러시아가 보상한다”며 불평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푸틴은 아예 “힘의 권력을 이용하는 서구의 외교 정책”이 북한 같은 비교적 작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북한에 접근하고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과 대립하자, 일부 반제국주의자들에 게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반제국주의적’ 국가로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로, 앞에 서 설명했듯이 그 자신이 제국주의인 갈등의 한 당사자다.

‘신냉전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균형을 동맹 관계를 형성해 간다고 묘사하지만 실제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중·러 관계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전술적으로 공조하지만, 전략적 동맹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문제나 인도의 부상에 따른 입장 차이 등 양국의 이익 충돌 요인들도 존재한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접근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갈등 요인들에 주목해 이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듯하다.

일본의 개헌

일본의 아베 내각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 견제에 앞장서 왔다. 꾸준히 군비를 늘리면서, 미국의 동맹 정책에도 적극 협력했다. 최근 일본은 캄보디아·스리랑카 등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려 한다.

일본 지배자들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서 북한 ‘위협’론은 유용한 명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처가 자민당의 ‘2퍼센트 중액 제안’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올봄 한반도 긴장이 높았을 때 특히 일본의 우익 정치인과 언론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퍼뜨린 것도 개헌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까?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북핵 문제가 대외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언했다. 그는 올봄에 전쟁 위기설이 돌 정도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물론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렇게 지적했다. “전략적 인내의 많은 요소들이 남아 있다. 즉,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확대,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질 것이라고 단정지는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쟁으로 기존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이따금 앞뒤 안 맞는 발언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이에 대응한 반발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취임

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

며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무역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로서도 북핵 문제는 상당한 난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핑계 삼아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 전진 배치를 정당화하고 도 모를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일부 동참하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을 이용해 북한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북한 지배 관료들이 반발해 최근 북·중 관계는 많이 소원해진 상태다.

〈한겨레〉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인 존 페퍼는 트럼프 정부에게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란다면 그간의 정책을 뒤집어 북한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중국과 북한의 틈을 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⁶

물론 조만간 트럼프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도 역대 미국 정부들처럼 북한 ‘위협’을 과장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이용하는 게 북한을 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여긴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설사 미국이 북한을 끌어안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제국주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결국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 접촉 수준을 넘어 공식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정착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놓여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지속적 해빙 조건이 북한이 섣뜻 받아들이기 힘든 데다 대화가 시작돼도 안정적 합의에 이르는 데까지 온갖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한반도 문제를 한상 그 자체로 때어 내어 보지 않고 **경쟁 제국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방위비가 ‘국민총생산(GNP)’ 대비 1퍼센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집권 자민당은 향후 방위력 정비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퍼센트로 증액하는 것을 아베 내각에 제안했다. 트럼프가 나토(NATO)에 제시한 ‘2퍼센트’를 따라가자는 것인데, 앞으로 일본의 군비 증강 추세는 더 가팔라질 듯하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평화헌법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진지하게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내년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헌안 9조에 자위대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려 한다.

일본 지배자들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서 북한 ‘위협’론은 유용한 명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처가 자민당의 ‘2퍼센트 중액 제안’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올봄 한반도 긴장이 높았을 때 특히 일본의 우익 정치인과 언론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퍼뜨린 것도 개헌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바라다면 그간의 정책을 뒤집어 북한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중국과 북한의 틈을 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⁶ 물론 조만간 트럼프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도 역대 미국 정부들처럼 북한 ‘위협’을 과장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이용하는 게 북한을 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여긴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설사 미국이 북한을 끌어안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제국주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결국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 접촉 수준을 넘어 공식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정착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놓여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지속적 해빙 조건이 북한이 섣뜻 받아들이기 힘든 데다 대화가 시작돼도 안정적 합의에 이르는 데까지 온갖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한반도 문제를 한상 그 자체로 때어 내어 보지 않고 **경쟁 제국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

¹ 알렉스 캘리니코스,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책갈피, 2011년, 307~309쪽.

² 조셉 추나라,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여전한 특징’, 《노동자 연대》 169호.

³ Michael Roberts, “Trump’s 100 days,”

2017년 3월 22일(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17/03/02/trumps-100-days/)

⁴ 〈연합뉴스〉 2017년 6월 8일자

⁵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 2017년 5월 23일

⁶ 존 페퍼, ‘트럼프의 다음 외교적 반전?’ 〈한겨레〉 2017년 5월 8일자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강동훈 기자가 쓴 이 글은 6월 20일 '노동자연대'의 성명서로 채택됐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박삼구와 채권단(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을 중단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회장 박삼구가 무리하게 돈을 빌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2008~09년 세계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도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이 끝났다.

그런데 채권단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박삼구가 사재(私財)를 출연했다며 그의 그룹 경영권을 보장했다. 박삼구는 경영권을 이용해 다시 돈을 빌려, 매각했던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려 하자 채권단과 박삼구의 사이는 틀어졌다. 박삼구는 매각을 방해하려고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타이어 매출의 0.2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매각을 자꾸 방해하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어 박삼구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4월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고용 보장 없는 매각 중단 촉구 2차 상경 투쟁 결의대회'

박삼구 일가의 금호홀딩스(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도 빼앗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막대한 빚을 진 박삼구가 채권단에 맞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채권단이 법정관리와 경영권 박탈이라는 협박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인 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의 고용 유지가 매각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광주전남 지역 경제

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더는 세금으로 금호타이어를 지원할 수 없고, 매각이 무산되면 ‘국제신인도’가 훼손된다고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윽게도 더블스타와 박삼구 모두를 반대하

며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갖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빚을 늘리며 계열사 지분을 매입해 온 박삼구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빚을 갚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더블스타는 노동자들을 공격한 뒤 아마도 ‘먹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조차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될 경우 재무 안정성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며 최근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이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10년 1천3백여 명이 정리해고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임금이 40퍼센트 가까이 삭감되는 고통을 당했다. 박삼구의 경영 실패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모두 노동자들이 치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더는 위기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매각 중단과 박삼구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구히 국유화하라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이 재매각을 추진하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를 영구히 국유화해 애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줘야 한다.

17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7

7.20(목) - 23(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주목할 패널 토론들

- ★ 현 시기 노동운동과 좌파의 과제 — 문재인 노동정책, 민주노조운동 진단, 노동자 계급의 연대 방안
- ★ 한국 여성운동의 현재와 미래
-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좌파
- ★ 세월호 참사가 보여 준 한국 사회 현실과 교훈

※ 웹사이트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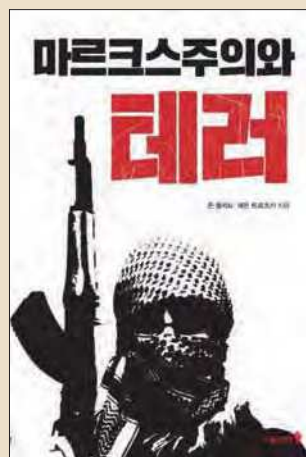
참가비 하루 25,000원 / 나흘 70,000원

대학생·청년실업자 할인가 하루 15,000원 / 나흘 40,000원 |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할인가 하루 8,000원 / 나흘 22,000원

※ 노동조합·소모임·학생회 등 한 단체에서 나흘 티켓을 10명 이상 구입시 단체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책

테러가 일상화된 시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테러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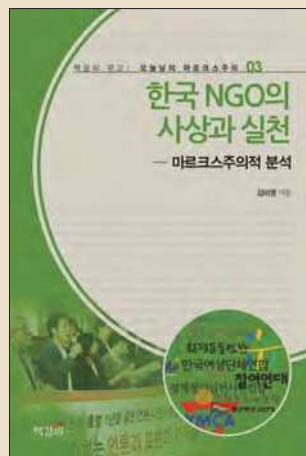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와 테러

레온 트로츠키 지음, 노동자연대
32쪽, 2,000원

구입 문의: 노동자연대
02-2271-2395, workerssolidarity.org

시민단체 인사들 대거 문재인 정부 요직에 등용 ... NGO를 분석한다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하영 지음, 책갈피, 191쪽, 6,900원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미국 성소수자들이 자긍심 행진을 막아서다, 왜?

— 차별받는 사람들 간의 연대나 국가와 기업의 후원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미국판 퀴어 퍼레이드)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동안 자긍심 행진이 대기업과 국가기구의 후원을 받아 온 데 이어 경찰까지 행진에 참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LGBT+ 중에서도 주변적 처지에 놓인 이들은 소원해지고 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미국의 사회주의자 사라 마모와 조나 벤 아브라함의 글을 김종환 기자가 소개한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42번가에서 열린 자긍심 행진을 성소수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정의 없이 자긍심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 활동을 주도한 세 그룹은 ‘자긍심 행진조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LGBT+’는 경찰을 자긍심 행진에 참가하도록 허용한 것에 항의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LGBT+’는 조직위원회가 군대의 후원을 받은 것에 항의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이주민에 연대하는 LGBT+’는 조직위원회가 감옥과 송유관 건설 사업과 이주민 차별 정책을 후원하는 은행의 후원을 받은 것에 항의했다.

이 행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 안에서 벌어진 논쟁을 반영한다. 지난해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활동가들이 토론토 자긍심 행진 와중에 연좌 농성을 벌이며, 경찰이 제복 차림으로 행진에 참가하는 것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당시 토론토 자긍심 행진 조직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입장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연대하

는 사람들과, 대기업과 게이 경찰관이 다수 참가해 자긍심 행진의 ‘명망’을 높이는 데 연연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 논쟁은 세계 곳곳 자긍심 행진이 대기업의 후원을 더 많이 받고 경찰의 참가가 갈수록 흔해지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 ‘정의 없이 자긍심 없다’는 이런 흐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BT+ 운동이 차별적 체제와 공모해 퀴어와 트랜스젠더를 한층 더 주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정의 없이 자긍심 없다’는 자긍심 행진이 더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지 말고, 기업과 경찰이 행진에 참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긍심 행진 후원자 목록에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며 깊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웰스파고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내쫓고 초대형 송유관을 건설하는 다코타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원하고, 주책담보대출 위기를 이용한 악탈적 금융으로 비난받는 기업이다.

특히, 경찰의 행진 참가는 자긍심 행진의 역사적 기원과 충돌하는 문제다. 자긍심 행진은 6월 말을 전후로 열리는데, 이는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6월 28일 뉴욕 경찰의 성소수자 탄압에 항의해 술집 ‘스톤월 인’에서 벌어진 반란이다(아래 기사 참고).

경찰은 성소수자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일부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자긍심 행진에 경찰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 준 충격 때문이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끔찍하게도 올랜도 공격의 피해자는 성소수자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을 행진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 즉 성소수자들의 안전을 경찰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트랜스젠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퍼센트)이 경찰의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아주 빈번하게 당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경찰이 성산업 종사자로 간주하며 대하는 일이 잦다고 답한 응답자도 많았다(특히 유색인 트랜스젠더 여성).

그밖에도 경찰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경찰을 끌어들이는 것은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단결을 깨뜨리는 일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경찰 단속에 항의해 일어난 스톤월 항쟁



“정의 없이 자긍심 없다” 위선적인 대기업 웰스파고의 자긍심 행진 참가를 거부하며 웰스파고의 행진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성소수자들

제국주의의 “핑크 워싱”에 반대하라

성소수자 해방 운동이 전진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연대다. 6월 4일 뉴욕에서 열린 제53회 ‘이스라엘 건국 경축 대회’ 가두 행진을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가로막은 것은 바로 그런 연대를 보여 줬다. 이 행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정당화하려고 이스라엘을 성소수자 권익의 수호자인 양 내세우는 대열이 있었다. 이 행진을 가로막은 활동가들은 이 대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인종차별을 제도화하는 식민 정착자들의 국가다.

이스라엘의 몇몇 도심지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지 세탁용이다. 이스라엘 사회의 추악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권익을 약간 옹호하며 자신의 악행을 가리는 행태를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핑크 워싱”이라고 부른다.

자긍심 행진에 갈수록 대기업의 참여와 후원금이 느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 운동은 미국 경찰이

든, 이스라엘 점령자들이든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자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대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자긍심 행진이 성소수자 운동이 그동안 이룬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를 알리는 자리가 되려면, 기업·경찰·국가기구·제국주의가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성소수자 권리 확대와 보호는 위로부터 누군가 해 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아래로부터, 권력에 도전하는 집단적 저항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다.

스톤월 항쟁의 전통은 달랐다

1960년대에 미국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나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안식처인 게이 나이트클럽까지 경찰의 일상적 습격·단속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경찰 단속에 항의해 뉴욕시의 한 술집이었던 ‘스톤월 인’에서 일어난 저항은 “게이 파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 됐다.

나중에 스톤월 항쟁으로 불리는 이 투쟁은 흑인과 아시아계 트랜스

젠더 여성들이 이끌었고, 국가 폭력 종식과 성소수자 생존을 위한 투쟁을 운동의 중심에 놓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긍심 행진은 너무나도 자주 이런 사실을 지워 버린다.

스톤월 항쟁은 천대받는 사람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당시 많은 인종차별 반대 단체들도 스톤월 항쟁을 지지했다.

이런 전통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벌어진 에이즈 활동가 단체 ‘엑트 업’(ACT UP)으로 이어졌다. 2014년에 부상한 운동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도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의 많은 리더들은 흑인 성소수자들이고, 그 운동은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썼다.

출처 미국 반자본주의 언론 <소셜리스트 워커> 2017년 6월 16일자

온라인 관련 기사 — 한국에서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국주의 국가 대사관과 다국적 기업의 후원과 참여를 허용했다. 이것이 왜 성소수자 운동의 발전에 해로운지를 다룬 기사 ‘제국주의 국가 대사관과 다국적 기업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는 위선이다’도 같이 읽어보시오.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백은진

철도노조는 지난 6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24일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민영화 폐기, 외주화 제로(ZERO)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신입사원 연봉제 철폐, 후퇴한 단협 복원 등이 주요 요구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한 것을 다시 합치는 것(상하통합)에 찬성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는 최근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SR(수서고속철도)의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재통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중단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김현미는 철도 상하통합과 SR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철도공사와 SR의 경쟁이 “철도 투자 확대, 공사 경영 효율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영 효율화’는 정규직 감축과 외주화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공격과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단골 논리였다. 이것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약화로 이어졌다.

지금도 철도공사는 SR 개통 이후 적자가 늘어났으며 노동조건을 공격해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하면 적자는커녕 늘어난 운영 수입으로 요금도 낮추고 적자 노선 지원 등 철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되돌리고 민영화를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2015년에 폐지된 근속승진제를 부활시키고, 임금피크제를



심각한 인력 부족은 노동자와 승객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고(故) 조영량 조합원 추모결의대회

폐지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눌리고 심지어 각종 단협 개약으로 후퇴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

최근 광운대역 수송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보여 주듯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데도 사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무를 강요해 노동 강도와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이 점도 노동자들의 큰 불만이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각종 복지 축소, 외주화 확대 등 — 으로 후퇴한 노동조건을 회복하려는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도노조의 요구 중에는 외주화 중단, 기존 외주 업무 환원, 생명안전-상

사고응급무 직접고용 요구가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다.

6월 14일 철도 비정규노조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여기에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철도고객센터지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자회사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과 철도공사의 민간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모두 철도공사가 “진짜 사장”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 뒤, 직접 고용과 임금 ·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지면서 노조 가입이 급속히 늘었다.

최근에는 민간 외주 업체 노동자들이 철도노조에 대거 가입해 부산고속

차량KR테크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KTX를 정비하는 노동자들로, 1백71명 중 1백2십 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철도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도노조 가입을 환영하고 연대를 확대하려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투쟁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과 같거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이들의 조건 개선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업무 간 소통도 원활하게 만들어 철도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철도공사와 자회사들은 정부가 정한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처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인력도 충

원해야 한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들이야말로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늘리는 방법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일자리 7만 1천 개의 대부분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1년도 안 되는 계약직이 절반에 가깝다. 임시직도 상당하다.

따라서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늘리게 하고, 이러한 재원을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마련하게 강제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철도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확대는 이런 힘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